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학】문제 및 해설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한 외국의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띠톱 판결이다.
- ②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 판결은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이다.
- ③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확립된 판결은 맵(Mapp) 판결이다.
- ④ 국가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에스코베도(Escobedo) 판결이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에스코베도(Escobedo : 1964년) 판결』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조력을 얻을 기회를 주지 않아 자백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이다. 즉,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이 있은 후 1966년에 『미란다 판결』이 나오게 된다. 국가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1873년 프랑스에서 블랑코(Agnès Blanco)라는 소녀가 국가공공기관에 고용된 사람에 의해 상해를 입었던 사건에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참고】 맵(Mapp) 판결과 워스(Weeks) 판결

미국에서는 이른바 Weeks 판결과 Mapp 판결에 의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증거법상 확고 부동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으며,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한다.
-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구분이다.
- ③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작용하며,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작용한다.
- ④ 질서경찰과 보통경찰은 경찰 활동 시 강제력의 사용유무로 구분된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주로 현재 및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된다.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서, 범죄의 수사작용을 의미한다. 주로 이미 발생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된다.

3. 경찰의 임무와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인간의 존엄·자유·명예·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에 대한 위험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방지는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경찰공무원이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 라.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에서만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④

【해설】 “가”는 옳은 설명이며, “나”,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 나. (×) 공공의 안녕과 관련하여 경찰은 사유재산적 가치 및 무형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 다만, 사유재산권의 보호활동에는 경찰의 개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다. (×)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
- 라. (×)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재판장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법원조직법」 제60조 제2항).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 나.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 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관리가 용이하다.
- 라.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나”는 옳은 설명이며, “가”,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 가.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비권력적 수단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 다. (×)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찰 개혁이 용이하고, 지방의 특수성에 따른 경찰행정의 추진이 용이한 것은 자치경찰이다.
- 라. (×) 국가경찰은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은 낮다.

5.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 인권보호담당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다.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라.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 ① 가.(O) 나.(X) 다.(O) 라.(X) ② 가.(X) 나.(X) 다.(O) 라.(O)
 ③ 가.(X) 나.(X) 다.(X) 라.(O) ④ 가.(X) 나.(X) 다.(X) 라.(X)

【정답】 ④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틀린 설명이다.

가. (X) 인권보호담당관은 분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4조).

나. (X)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경찰관서의장은 인권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2항).

다. (X)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경찰서는 인권위원회의 설치기관이 아니다.

라. (X)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4조).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증여를 포함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증여는 제외된다는 것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7. 경찰의 일탈과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펠드버그는 경찰이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② 델라트르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roi론’에 따라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 ③ 윌슨(O.W.Wilson)은 ‘경찰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 ④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roi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델라트르(Edwin J. Delattre)는 작은 호의에 대한 반대론적 입장에 있는 학자이다.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정례화되면 의무감이나 신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와 2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9. 다음 우리나라 경찰윤리강령들을 제정된 연도가 빠른 것부터 느린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 가. 새경찰신조 | 나. 경찰헌장 |
| 다. 경찰윤리헌장 | 라. 경찰서비스헌장 |

- ① 가→나→다→라
- ② 나→가→다→라
- ③ 나→라→가→다
- ④ 다→가→나→라

【정답】 ④

【해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꾸준히 경찰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제정순서는 다음과 같다.

경찰윤리헌장(1966년) → 새경찰신조(1980년) → 경찰헌장(1991년) → 경찰서비스헌장(1998년)

10. 런던수도경찰청을 창시(1829년)한 로버트 필 경(Sr. Robert Peel)이 경찰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경찰개혁안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 ② 범죄발생 사항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 ③ 단정한 외모가 시민의 존중을 산다.
- ④ 경찰의 효율성은 항상 범죄나 무질서를 진압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19세기 초 영국의 내무부장관이었던 로버트 필(Robert Pell)이 「영국 수도경찰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이후부터, 오늘날의 경찰학은 중립적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로버트 필은 경찰의 능력은 가시적인 경찰력의 행사가 아닌, 실제적인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에 의해서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의 한국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군정하에서는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경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
- ② 광복 이후 신규경찰 채용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경찰경력자들이 다수 임용되었으나, 독립운동가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채용되었다.
- ③ 의경대는 상해임시정부시기 운영된 경찰기구로서 교민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호구조사 등을 담당하였다.
- ④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정답】 ①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미군정시대에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또한 경제경찰업무를 경찰업무로부터 제외하고, 각종 치안입법(「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보안법」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미군정청은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식민지시대의 경찰조직 및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군정시대에 경찰의 치안유지기능 이외의 기능을 다른 행정관서로 이관시키는 『비경찰화』 작업을 실시하여 경찰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12.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가 운용하던 비민주적 형사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영미식 형사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는데, 1945년 미군정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 나.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부수립 이후 1948년 제정되었다.
- 다.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이었다.
- 라.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고,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 마.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해설】 “가”, “다”, “라”, “마”는 옳은 설명이며, “나”는 틀린 설명이다.

나. (×) 1953년 12월 경찰관의 권한행사의 한계를 규정한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공포되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영미법적 사고가 최초로 반영되었다.

13. 외국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경찰업무의 집행에 있어 범죄대응의 효율성보다는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강조하는데,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어 있다.
- ② 프랑스 군경찰은 군인의 신분으로 국방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일본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개시·진행권 및 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과 상호대등한 협력관계를 이룬다.
- ④ 독일경찰은 연방차원에서는 각 주(州)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이지만, 주(州)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州) 내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주(州)단위의 국가경찰체제이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일본의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독자적 수사를 할 수 있는 1차적 수사기관이 되고, 검찰은 공소권의 전담자로서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되었다.

14.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뒤죽박죽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모델은 무엇인가?

- ① 카오스모델 ② 쓰레기통모델
③ 아노미모델 ④ 혼합탐사모델

【정답】 ②
【해설】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① 문제, ② 해결책, ③ 선택 기회, ④ 참여자의 네 요소가 쓰레기통 속에서와 같이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을 말한다. 이 모형은 갖가지 쓰레기가 우연히 한 쓰레기통에 모여지듯이 4가지의 구성요소, 즉 문제·선택·해결·참여자의 흐름이 제각기 시간을 달리하며 우연히 한 곳에 들어와 모여질 때 비로소 통일된 하나의 의사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15. 경찰조직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눌 때 내용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아닌 자는?

- ① 맥클랜드(McClelland) ② 허즈버그(Herzberg)
③ 아담스(Adams) ④ 매슬로우(Maslow)

【정답】 ③
【해설】 동기부여이론에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다. ① 『내용이론』은 사람을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이론이다. 내용이론은 사람이 동기부여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둔다. 내용이론의 종류에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이론,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맥그리거의 X·Y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샤인의 4대 인간관이론 등이 있다. ② 『과정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곧바로 인간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이론이다. 과정이론의 종류에는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모형,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등이 있다.

16.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조직의 역사, 교통통신의 발달, 관리자의 리더십(Leadership), 부하의 능력 등은 통솔범위의 중요 요소이다.
- ② 통솔범위의 원리는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하계층간에 명령복종관계를 적용하는 조직편성원리로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한다는 원리이다.
- ③ 무니(J. Mooney)는 조정·통합의 원리를 조직의 제1원리이며 가장 최종적인 원리라고 하였다.
- ④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 누구나 한 사람의 상관에게 보고하며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통솔범위』(span of control)의 원리란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를 말한다. 이는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적정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로서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보기의 설명은 『계층제의 원리』이다.

17.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경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우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31조 제3항).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④는 틀린 설명이다.

- ①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② (×)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④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19.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I급 비밀로 하며, II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II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 ③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을 말한다.
- ④ 비밀열람기록전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 ② (×)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II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전직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는 사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 ②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주한 일본대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인 일요일에 주한일본대사의 숙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그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확장기를 사용한 옥외집회가 가능하다.
-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집시법이 규정하는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부득이 새벽 1시에 집회를 하겠다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다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예외적 허용사유 없이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전직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는 사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④ (×) 한정위헌결정에 의해 일몰후부터 자정까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고, 자정부터 일출전까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따라서 일몰후부터 자정까지는 야간시위는 허용되며, 자정부터 일출전까지는 야간시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1.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나.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 해양경찰서장을 제외한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라. 범칙금 납부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가.(X) 나.(X) 다.(X) 라.(X) ② 가.(O) 나.(X) 다.(O) 라.(X)
 ③ 가.(O) 나.(X) 다.(X) 라.(O) ④ 가.(O) 나.(X) 다.(X) 라.(X)

【정답】 ④

【해설】 “가”는 옳은 설명이며, “나”,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나. (X)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

다. (X)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장은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3항).

라. (X)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2항).

22. 다음 사례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A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고 C녀는 D남과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다. 그 후 A와 C가 재혼하였다. A에게는 부친 E가 있으며, C에게는 모친 F가 있다. 한편 A의 형제자매로는 남동생 G가 있으며, C의 형제자매로는 여동생 H가 있다. G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충남 아산에 있는 A와 C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H는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다.

- ① B ② F ③ G ④ H

【정답】 ④
【해설】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B녀, C녀)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E, F)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G)

23.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비경찰활동은 하향적 명령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경비수단의 종류 중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며 직접적 실행행사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③ 경비경찰은 실행행사시 상대의 저항력이 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강력하고 집중적인 실행행사를 하여야한다.
- ④ 경비경찰 활동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현상유지적 활동 수행의 특성을 가진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비수단의 종류에는 간접적 실행행사방법으로서 『경고』가 있고, 직접적 실행행사방법으로서 『제지』 및 『체포』가 있다. 체포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일 때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근거한 신병확보의 수단이다.

24.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마.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 보도란 연속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가通行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나.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 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모범운전자란 동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가.(X) 나.(O) 다.(X) 라.(O) 마.(X) ② 가.(X) 나.(O) 다.(O) 라.(X) 마.(O)
- ③ 가.(X) 나.(X) 다.(X) 라.(O) 마.(X) ④ 가.(X) 나.(O) 다.(X) 라.(X) 마.(X)

【정답】 ④

【해설】 “나”는 옳은 설명이며, “가”, “다”, “라”, “마”는 틀린 설명이다.

가. (X) 『보도』란 연속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通行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通行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다. (X)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라. (X)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마. (X) 『모범운전자』란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

25.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제외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다.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라.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외국인은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 ① 가.(O) 나.(X) 다.(O) 라.(O) ② 가.(X) 나.(O) 다.(O) 라.(O)
 ③ 가.(X) 나.(X) 다.(O) 라.(X) ④ 가.(O) 나.(X) 다.(O) 라.(X)

【정답】 ③

【해설】 “다”는 옳은 설명이며, “가”, “나”, “라”는 틀린 설명이다.

가. (X)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한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4항 후단).

나. (X)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2항).

라. (X)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계속적으로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26.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가.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나.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청원주 및 관할 감독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틀린 설명이다.
 가. (×)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제4조 제3항).
 나.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다.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2). 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르나, 기타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계약이다.

27.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나. 경찰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률은 경찰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법원이다.
 다.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고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라.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 ① 가.(O) 나.(X) 다.(X) 라.(O) ② 가.(O) 나.(O) 다.(X) 라.(X)
 ③ 가.(O) 나.(O) 다.(X) 라.(O) ④ 가.(X) 나.(O) 다.(X) 라.(O)

【정답】 ③
【해설】 “가”, “나”, “라”는 옳은 설명이며, “다”는 틀린 설명이다.
 다. (×) 『조리』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 인정되는 원칙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조리상 원칙들이 점차 성문화되어 가고 있다(실질적으로 「행정기본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경찰행정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28.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여자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게 하여 쇼윈도우에서 있도록 하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쇼윈도우 앞에 몰려들어 도로교통상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 ① 조건설에 의하면 균중, A, B 모두 경찰책임자가 된다.
- ②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이론(목적적 원인제공자책임설)을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A로 하여금 B를 쇼윈도우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 ③ 직접원인설에 의할 때 경찰책임자는 B이다.
- ④ 교통장애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면 A를 경찰책임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친권자, 사용자 등)는 자신의 지배를 받는 자의 행위로 부터 발생하는 경찰위반상태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이는 자기책임이며 대위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직접원인설에 의하면, 경찰책임자는 A이다.

29.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에 무관하게 행위책임을 진다.
- ③ 행위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상관없이 위험을 야기시키면 행위책임을 진다.
- ④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발동으로 경찰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책임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 발동으로 경찰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책임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찰권 발동은 위법이며,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30. 경찰상 긴급상태(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위험의 현실화가 목전에 급박하여야 한다.
- ② 경찰상 긴급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③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 보충성은 전제조건이므로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또는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는 위험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 ④ 경찰권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찰비책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하며, 결과제거청구와 같은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찰긴급권은 예외적인 것으로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경찰긴급권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법으로서 「소방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 처벌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1.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지만,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찰청장은 ㉠ 전시·사변·천재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3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③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④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3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며,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자체에서 수행한다.
-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라”는 옳은 설명이며, “가”, “나”, “다”는 틀린 설명이다.

가. (×)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나.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다. (×)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34.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동법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④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4항).

35.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 ② 경찰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③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 ④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의 전날

36.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가.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해양경찰관서 미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라.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힐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나”는 옳은 설명이며, “가”,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가.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다. (×)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청·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라. (×) 질문시 경찰관은 제복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여기서 경찰관의 신분증을 증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만을 인정한다.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3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나.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할 수 있다.
- 다.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라.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정답】 ④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틀린 설명이다.

가.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보호조치 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 (×) 경찰관이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등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다. (×) 경찰관이 피구호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5항). 해당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6항).

라. (×) 경찰관은 응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예 : 국공립병원, 사설의료기관, 보건소 등)이나 공공구호기관(예 : 아동보호소, 고아원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경찰관의 응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 거절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3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침해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긴급하게 사용할 때에는 안전검사 없이 안전교육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다.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라.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그 안전교육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가”는 옳은 설명이며, “나”,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나.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본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즉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단서).

다. (×)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6항).

라. (×)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안전교육 ×)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39.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
- ③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상의 즉시강제가 가능하다.
- ④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찰벌은 과거의 범위반에 대한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집행벌(이행강제금)과는 그 규제의 목적이 달라 집행벌(이행강제금)과 경찰벌은 병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병과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판례).
 ② (×) 경찰상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다. ㉠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 현행법상 집행벌의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으로서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 직접강제의 실정법상 근거로서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법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도로교통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식품위생법」상 폐쇄조치,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이 있다. ㉣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고, 개별법으로는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등이 있다.
 ③ (×) 경찰상 즉시강제는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를 요한다. 즉, 경찰상 즉시강제는 행정상의 의무존재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40.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가.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나. 시위진압 과정에서 가해공무원인 전투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다.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
- 라.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나 하천은 물론 경찰견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④
【해설】 “가”, “나”, “다”, “라”, “마” 모두 옳은 설명이다.